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서민경제 대책 등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 당정청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

### 선거 이후 첫 회의... ‘서민경제 안정’ 민생행보 속도 민주, 정책홍보 강화·확장재정 요구... 경제TF 가동 장하성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실현 앞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20일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민생을 일으켜 달라는 국민요구를 절감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청 주요 인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승리 후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최저임금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여파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에 관한 토론도 이뤄졌지만,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만만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민생도 일으켜 달라고 당부했다”며 “국민의 선택

이 현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오롯이 집권여당의 몫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실현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당정청은 특히 최근 들어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가 상당히 악화한 데 대해 엄중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쏟아냈다. 1분위 소득분배 악화를 고려,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는 제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서민 생활고를 어루만지는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야당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강조해온 새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동력을 확보하려면 정책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도 당에서 나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졌다는 일부 비판을 정부가 자초했다는 일종의 손소리로 해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얻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주당 지도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이달 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당정청은 양극화 심화와 유례없는 저출산, 제조업 경기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나가려면 국가재정을 과감히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적극적 표현을 썼다”며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부터 경제민생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며 당정청의 민생 챙기기 노력과 발을 맞췄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최윤열 의원과의 원 3명,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눴다”며 “조만간 지방공약 이행 TF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천정배 “민주당에 ‘개혁입법 연대’ 제안” “개혁세력 주도하는 국회 만들어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울)은 2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개혁세력이 최소 157석의 국회다수를 확보한 것과 관련, “이제 촛불국민혁명의 최종 승리를 위해 개혁입법 연대에 나서야 할 때”라며 ‘개혁입법 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반기 원구성에선 개혁세력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는 개혁국회를 만들자”면서 “국회 내 개혁세력은 이제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직과 함께 다수파를 짊어질 수 있게 됐다. 이를 실행해 개혁입법의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혁입법 과제 중 지금껏 정부와 국회가 이룩한 것은 거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촛불혁명의 요구로 표출된 개혁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탄했다.

천 의원은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이 상임위를 장악하고 제멋대로 입법 자체를 저지하거나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촛불민심에도 어긋난다”며 “전체 상임위의 위원장직과 다수위원을 개혁세력이 점하면 적폐세력의 방해가 있더라도 20대 국회 임기 안에 모든 개혁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이라며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쟁취하면 장기적으로 나머지 개혁과제들도 민심의 요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인화 “포스코회장 정치 입김 배제해야” 조직서 인정받는 내부 출신 인사 선출 촉구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구례)은 20일 “포스코는 4대 김만제 회장 이후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하는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중도퇴진을 되풀이한 포스코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정치적 입김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간에서 현 정부 실세와 연관있는 몇몇 외부인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며 “포스코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낙하산이 아닌 조직에서 능력으로 인정받는 포스코

출신이 회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포스코 출신의 역량있는 분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은 기자



###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제도기간 필요” 이낙연, 당정청협서 언급...부처 협의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한국경제자총협회가 전달 근로시간 단축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의 제도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데 대해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경총의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중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 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제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노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당·정·청간에 긴밀히 노력하면서 당사자가 체감할 만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철도·가스·전기부터 남북러 3각 협력 가능” 문 대통령 “한·러 경험 시작 단계...푸틴과 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철도·가스·전기 세 분야부터 남북러 3각 협력이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러시아 공영통신사 타스통신, 일간지 로시스카야가제타, 국영 러시아방송과 가진 합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러 3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국과 러시아간 협력이 북한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와 국가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철도가 연결되고 그것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면 한국으로부터 유럽까지 철도로 물류이동이 가능하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과 한국에 큰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러시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천연가스가 가스관을 통해 북한으로, 한국으로 공급되고 나아가 해저관들을 통해 일본에까지 공급될 수 있다”며 “전기의 경우도 ‘에너지 링(프로젝트)’ 등으로 동북아 전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생산된 전력이 북한과 한국으로, 나아가 일본으로까지 공급된다면 이것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간 경제협

### 청 “북중회담으로 비핵화 한 걸음 더 진전” “이해당사자 중요 역할...한국도 긴밀 협의 중”

청와대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비핵화를 향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중국이 비핵화 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에 따른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요청에 “이번 북중정상회담이 비핵화에 한 걸음 더 진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중국이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완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역할론과 관련해 ‘비핵화의 안정적 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를 묻자 “북한으로서도 비핵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 중국의 존재가 안전판 역할을 담보하는 역할이 있을 것 같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한반도의 밀접한 이

해관계 당사자인 중국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국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북중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중국 양쪽의 정보를 한국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다. 양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6·15남측위, 문재인 정부 첫 민간단체 방북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가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방북했다. 남측위는 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의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중국 선양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남측위의 이번 방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로는 처음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그간 막혀온 남북 민간교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대표단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6·15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판문점선언 이행과 민족공동행사, 분야별 교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출국 직전 발표한 방북성명에서 “어렵게 성사된 이번 6·15남북해외 위원장 회의를 통해 각계가 함께 하나같이 구체적인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 나가자 한다”며 “이번 회의가 판문점선언 시대의 통일운동을 새롭게 설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